

“우리가 경제정당”... 불붙은 2野 정책 경쟁

더민주 '구조조정 조건부 찬성' 수권정당 면모 각인

국민의당 '미래 일자리 위원회 설치' 카드로 반격

4·13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제 정당'을 모토로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회 주도권을 쥐게 된 두 야당은 입법 과정을 앞다투어 발표하며 '경제'란 화두를 선전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민생 문제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등 연대와 견제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야당의 정책 경쟁은 일단 더민주가 야권에서 금지시해온 구조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아 국민의당이 일자리 카드를 꺼내들며 경쟁에 뛰어들어 형국이다.

더민주가 지난 20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조건부 찬성'을 밝힌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후속 대책을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하고 이 문제와 관련 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대에만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정책을 끌고나가는 등 '수권정당'의 모습을 각인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더민주가 우선 구조조정 문제를 다룰 당내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후속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더민주가 대전제로 내세운 실업대책 등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경제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촉법)을 두고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더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꺼내들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SBS라디오에 나와 "식유화학·정유·조선·해운산업 등에서 (일부 기업은)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다"며 "기축법 등을 통해 (구조조정) 초석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가 나아가 정부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야정(野政)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운열 선대위 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생각에 관해서는 안 되며 이를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일자리 문제를 화두로 내세우며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제49회 과학의날의 맞아

마포 당사에서 한 특별 브리핑에서 "미래 일자리 사업에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언했다.

미래일자리위원회는 미래에 유망한 직종을 발굴하고 이들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안 대표는 설명했다.

안 대표는 또 "청년들이 자금이 부족하거나 실패하면 재개를 못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창업)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적인 청년창업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세정 공약이행점검단장도 "한국은 개

도국의 추격과 선진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가 됐다"면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두 야당은 정책 경쟁을 하면서도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태도다. 더민주 원내 관계자는 "민생·경제와 관련된 정책 경쟁은 바람직하다"며 "우리와 국민의당이 협조해서 국회의 초점을 민생 문제로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모두 두 야당이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미래연구소 4·13 총선 평가와 전망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토론회 '4·13 총선 평가와 전망-확언된 민생, 넘겨진 과제'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왼쪽부터), 우상호 의원, 이철희 당선인 등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내년 재보궐선거 '미니 총선'되나

검찰, 선거법 위반 104명 입건...국민의당 박준영 결과 '주목'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인이 100여명을 넘어서고 있어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예상된다.

광주·전남지역에도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등 상당수의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사정기관의 레이다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현재까지 230여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고발·수사의뢰 조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13일 기준 전국적으로 104명의 당선인을 입건한 상태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당선인은 79명에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경찰에서도 자체 단속 결과 등을 토대로 총 45명의 당선인을 대상으로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때 당선인 중 8명이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당선 무효가 잇따르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선관위가 20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이 마감하는 오는 25일부터 3개월간 강도 높은 실사 등을 통해 '돈선거' 검증에 나설 방침이어서 당선무효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허위회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액의 0.5%만 초과해도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12일 열린 예정인 재·보궐 선거가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 일각에서는 1년 뒤에 치러질 재보선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소야대' 정국에 野 보좌진 영입전쟁

베테랑 몸값 '천정부지'... '러브콜' 5통 받은 보좌진도

4·13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 '거야(巨野) 시대'가 열리면서 야당 당선인간 애용 보좌진을 확보하기 위한 영입 경쟁이 치열하다.

123석의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나 60% 이상이 초선으로 채워진 신생 정당 국민의당 모두 의원실을 꾸리기 위한 인력 수요가 늘어나 야당 사정에 정통하고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은 일부 보좌진의 몸값이 '금값'이 됐다는 후문이다.

당장 구인에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국회 첫 입성을 앞둔 초선 당선인들이다. 선거를 같이 치러낸 캠프 인사들을 영입 '1순위'로 보고 있지만, 국회 경협이 촉적된 '베테랑' 보좌관도 필요한 실정기 때문이다.

더민주의 한 수도권 의원 보좌관은 21일 "누구 좋은 사람 없느냐", "추천을 좀 해달라"는 문의가 쇄도한다"며 "19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눈에 띄었던 보좌관들은 여기저기서 영입 전화를 받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의 한 당직자는 비례대표 당선인 5명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연락을 받고 '행복한 고민'이 빼졌다고 한다.

특히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활약상이 돋보인 일부 보좌관들을 놓고 당선인들 간 치열한 영입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더민주의 한 보좌관의 경우,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직급'을 올려주겠다고 설득 작업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동력 잃은 19대 마지막 국회

여야 상임위 간사 45명중 18명이 낙천·낙선

쟁점법안 폐기 수순...구조조정 관련법 짝짝 처리 변수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 개최됐다. 그러나 여야 모두 총선 후유증으로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 일부 이견이 없는 법안 외에 쟁점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임시국회와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일단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유성열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7일 화동, 의사일정과 처리 법안을 두고 실무 협상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20대 총선 후 여야 각 당의 사정인입 활동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후 지도부가 외해하면서 원수철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초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입법활동을 조율할 구심점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더민주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의원 숫자가 많은 19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 약 한 달 후 열리는 20대 국회에서 야권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캐스팅보트를 넘어 입법 주도 세력을 자

처하는 국민의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특히 20대 총선 후 상임위원회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에서 회의를 주재할 상임위원장 및 안건을 조율할 여야 간사 45명 가운데 18명이 20대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낙천·낙선했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법안소위 위원 10명 중 8명이 낙천 또는 낙선한 상황이다. 이외에 상임위에 발이 묶인 여야의 쟁점 법안 대부분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으리란 관측이다. 다만, 야당 발(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화두로 급부상하면서 막판 변수로 꼽힌다.

/*박지경기자 jkpark@

경실련 '전경련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수사 의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종교단체 계좌를 통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의 진위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경실련은 "전경련에서 어버이연합 측으로 역대 최대의 자금이 지원된 의혹이 맞다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해당한다"며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냈다. 어버이연합은 수백 차례 집회 등을 열어 정

부 친화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목소리를 내온 단체다.

경실련은 "전경련은 기독교선교복지재단 계좌로 2014년 9·11·12월에 총 1억2000만원을 송금했으며 이 재단은 같은 해 5월 말과 9월 초에 1400만원과 1200만원을 어버이연합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의뢰서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 부서를 선정해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지오옥션 경매 컨설팅

20년경력의 부동산 컨설턴트 성실한 상담

- ★ 공장 나주시 오량동 단층 및 2층공장, 대지5,735㎡ 건물3,965㎡ 동수오량농공단지내 ▶ 감정가 34억6천7백, 최저가 15억5천5백 (감정가의45%)
- ★ 공장 화순군 동면 단층 및 2층 미곡공장, 대지6,844㎡ 건물1485.8㎡ 연동마을 인근 ▶ 감정가 13억2천만, 최저가 4억7천3백 (감정가의36%)
- ★ 공장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전통식품공장, 대지7940㎡ 건물3502㎡ 단층 및 3층 ▶ 감정가 24억9천4백, 최저가 4억2천
- ★ 공장 광안구 안청동 하남산단내 대지5,940㎡ 건물5872㎡ 단층 및 2층 ▶ 감정가 57억6천8백, 최저가 57억6천8백
- ★ 나주시 경현동 지하1층~지상3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현리유원지부근 ▶ 감정가 30억6천5백, 최저가 8억7천9백 (감정가의29%)

※ 전지역 병원, 사우나 매매, 매입 상담 ※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조여사 010-6211-4585

채용 공고

- * 경매투자에 관심있는분
- * 부동산 배우면서 일할분
- * 공인중개사
- * 열정과 소신이 있는분
- *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분
- * 자격증 소지 무관

지금 도전하세요!!

T. 062-714-2251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수익성 부동산 다량 보유

- ★ 광안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기업은행뒤 대지 479㎡, ▶매매 5억8천만 (조정가)
- ★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 웰빙건강랜드부근 ▶매매 2억2천만 (조정가) 현 주자장
- ★ 근린시설 남구 주월동 지하1층, 지상8층 대지 3752㎡ 남구청 부근대로변 ▶ 감정가 35억4천4백, 최저가 35억4천4백
- ★ 근린시설 동구 동명동 8층 건물 대지 700㎡ 건물 2005㎡ 왕복 4차선▶ 감정가 19억6천, 최저가 19억6천
- ★ 의료시설 장성군 삼서면 상무대 입구, 대지 11,546㎡ 건물 5,733,24㎡ 대로변 ▶ 감정가 48억8천6백, 최저가 48억8천6백

※ 전국 물건 매입 ※

지오옥션 부동산중개법인(주)

공태풍 010-3820-8151

T. 062-714-2251

NPL채권 전국 물건 상담

이주원 국장 010-7171-7610

권리분석, 수익성 상담

강천구 이사 010-6838-6008